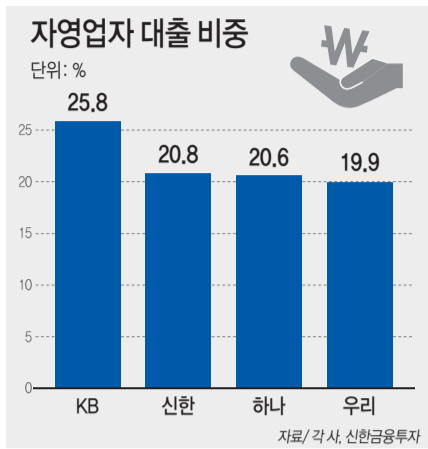


제로금리시대, 은행은 어떻게 사나... '초비상 경영'

금융권, 주요지표 실시간 모니터링
극단적 상황 대응 시나리오 점검

KB·신한은행, 금리인하 조치에
연간이익 각각 1400억 하락 예상



금융권이 사상 첫 '제로금리' 시대 진입으로 비상경영에 나선다.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 인하에 수익성은 물론 경기악화에 따른 건전성 악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실상 비상경영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하고 비상경영 대책위원회를 신설했다.

우리금융은 비상경영대책위를 통해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주요 지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기 상황을 정확히 진단한다는 방침이다.

비상경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국내외 펀드자산 등을 긴급히 점검하고, 외화 컨던전시 플랜(비상 대

응계획) 가동을 위한 모니터링으로 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됐다"며 "극단적인 위기상황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경영목표를 조정·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들도 올해 금리인하를 예상치 못했던 것은 아니다. 순이자마진(NIM) 하락에 대비해 이미 외형 성장과 수익에 대한 목표를 작년 대비 낮은 수준으로 세웠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금리인하가 예상보다 빠르고, 큰 폭으로 단행됐

〈상장은행금리 민감도〉

(십억원)	3개월 이하	3~6개월	6개월~1년이하	연간영향
상장은행 금리감응 겹	142,193	79,860	(90,279)	
금리인하 폭(%)	0.50	0.50	0.50	
적용기간(개월)	10.5	7.5	3.0	
적용기간 가중치	0.88	0.63	0.25	
세전이익 영향	(622.1)	(249.6)	112.8	(758.8)
세전이익 감소폭(%)				(5.5)
NIM영향	-6bp	-2bp	1bp	-7bp
원화대출금	1,054,593			
20F세전이익 추정치	13,718			

/자료=회사자료, 신한금융투자 추정

다는 점이다. 당장 은행별로 올 한해 이익(세전)에서 많게는 25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신한금융투자 김수현 연구원은 "기준 금리 인하로 연간NIM은 약 7bp(1bp=0.01%포인트), 세전이익은 5.5% 감소할 것"이라며 "NIM 반등 시점은 4분기 전후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이번 금리인하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올해 연간 기준 세전이익이 각각 1300억~14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

며, IBK기업은행과 지방은행들은 금리 민감도가 더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기준금리가 내린 지 2~3주 이후에 적금 상품 등 수신금리 인하에 나선다. 은행들이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를 올해 들어 뒤늦게 반영해 수신금리를 내리면서 얼마되지 않아 적금 금리 조정에 나서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마냥 미루기엔 인하폭이 크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를 인하함에 따라

라 시장 실제금리 등을 감안해 금리인하 시기와 인하 폭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아직 인하 시기 및 인하폭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부양책으로 대출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제한적일 것"이라며 "취약업종과 소상공인 지원, 금리 감면 등으로 이자이익은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경기가 장기 침체로 이어질 경우 자영업자 부실 등 건전성 악화도 불가피하다.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잔액은 342조2000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잔액 중 47% 수준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영전략, 재무목표의 변경은 시간을 두고 여러가지 시각에서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며 "향후 시장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건전성 관리를 통한 대손비용 감축, 다양한 조달 수단 확보 등을 통해 이익 감소 규모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생당 김광수(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에 합의한 뒤 승강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野, 11.7조 코로나 추경 합의

세입경정 삭감, 코로나 관련 편성
민주·통합당 요구내용 일부 수용

여야가 진통 끝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처리에 합의했다.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 7000억원을 유지했다. 그동안 여야는 추경안 처리를 위한 여러 차례 만남에도 합의안 도출은 하지 못했다.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증액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경우 '증액 불가'를 주장했다. 이에 추경 처리 방안 논의를 위해 17일 오전 열기로 한 여야 3당(민주당·통합당·민생당) 원내대표 회동은 열리지 못했다.

하지만 여야가 '17일 추경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진통 끝에 타협해 절충안을 마련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여야 3당(민주당·통합당·민생당) 간사는 17일 오후 회동에서 추경안 처리 방안에 합의했다.

여야 3당 합의안에 따르면 추경안 중 정부안에 3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세입경정을 8000억원 수준으로, 코로나

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서 일부 삭감해 총 3조1000억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했다.

여야 3당이 추경안 삭감으로 마련한 재원 중 1조원은 대구·경북 지역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2조1000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 등을 증액하는데 사용했다.

이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요구한 내용이 일부 수용된 셈이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원내 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 사태와 전 세계 경제 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자 소상공인과 비정규직에게는 절박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도 정부가 세입경정으로 편성한 2조5000억원과 고용지원사업 1조 6000억원 등 4조원 가량 삭감한 뒤 이를 마스크 일일 생산량 확대나 음압병실 확보, 코로나19 무료 검사 등 감염병 대응 사업에 사용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여야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 처리될 예정이다.

/최영훈 기자

“유례없는 비상상황... ‘실효방안’ 총동원”

文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특단의 대책·조치 신속결정·대처
32조 종합대책, 조기집행 만전을”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비상경제회의'에서 특단의 대책과 조치를 마련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일상적인 사회 활동은 물론 소비·생산 활동까지 마비된 데다 한국 경제도 타격받는 상황임을 고려한 조치다.

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으로서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해 "금융 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고 평가했다. 이어 비상경제회의에 대해 "비상경제 시국을 헤쳐 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라며 "코로나 19와 전쟁을 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 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비상한 대응에는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단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로나 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

정예산안(이하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부에 "32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 19 사태 극복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도 설정했다. 그는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든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음압병실 장비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 1면 '음압병실 장비 태부족...서 계속

이 관계자는 "직원들이 보호구를 착용하고 대구·경북 지역 병원과 서울 빅5 병원에 장비를 설치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며 "장비에 익숙하지 않은 의료진이 사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필요 장비 명확히 지정해야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과 기부금 등으로 병원들에 많은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병원 입장에선 언제 다시 유행할지 모를 감염병에 많은 투자를 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감염병 검역·진단 능력 등 방역체계 보강에 2조3000억원의 추경을 긴급 편성하고, 이 중 음압병실 등

지원에 601억원을 책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전담 병원으로 지정된 전국 69소에 시설비와 장비비 등 명목으로 총 390억원을 긴급 투입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음압병실에 구비해야 할 장비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는 이상, 병원들은 또 다시 구색만 맞출 가능성이 높다"며 "국립대학교 병원이 이럴 정도면 다른 병원들 사정은 더욱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